지속 가능한 농업 · 농촌 발전과 식생활 교육

황 민 영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지속 가능한 농업 · 농촌발전과 식생활 교육

황 민 영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1. 식생활의 현실

1) 식량 · 식품의 해외 의존율 심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006년 현재 약 27%에 불과하고, 열량 기준으로도 46.5%로서, FAO의 권장 기준인 6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식량 자급률이 낮아지고 있는 큰 이유는 자급 가능한 쌀의 공급 열량의 비중이 축소되고, 육류 및 유지류에 의존하는 식생활 패턴의 빠른 변화에도 있지만, 식량 자급에 대한 정책 당국의 의지와도 크게 관련이 있다. 특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 곡물과 유지 생산을 위한 옥수수, 콩 등 유지 종실의 대량 수입은 식량자급률 저하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 경상수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식량의 대부분을 미국, 호주 등 일부 곡물 수출 국가에 의존하고 있어, 최근 국제 곡물 가격 파동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식량 수급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해외 사료 곡물에 크게 의존하는 축산경영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대외 의존적 식량 수급은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의 안정적 구축,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식량의 해외 의존율 심화는 식량 안보에도 문제이지만, 식품의 안전성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농식품의 대량 생산, 재배 과정의 불안전성, 장거리 유통 과정에서 사용하는 살충 · 살균제의 남용, 싹이 나지 않도록 사용하는 제초제, 그리고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확 후 관리에서 사용하는 유해한 화학첨가물 사용 등은 기본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2)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의식 증대

오늘날 우리의 식생활에서 농식품 생산과 식(食)과 농(農: 농산물생산현장)의 거리 확대는 안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 체계의 확립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식품안전문제는 식품의 생산 및 상품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과다한 농약, 비료, 식품 첨가물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광우병(BSE), 조류독감(AI), 그리고 미생물이나 환경호르몬 등 새로운 위해 물질의 첨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날로 빈발하고, 규모화 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쇠고기 파동에서 비롯된 촛불데모도 이와 관련이 있고, 중국발 멜라민 사건,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그리고 유전자 조작 옥수수 · 콩 수입의 확대 등으로 인한 불안 의식, 이러한 식품 오염, 위해 식품 사건들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파급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수입 식품 검역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의 불신, 불안감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 특히 농식품의 해외 의존율이 심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나라의 농식품의 검역, 안전 관리 체계의 시스템 구축과 역량 강화는 농식품 정책의 주요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3) 외식의 증가와 육류・유지류의 소비 확대

2007년 기준, 국민들의 외식비 비중이 46.4%로서 전체식품비 지출의 절반 수준으로, 그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외식의 확대는 식품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과식, 영양의 불균형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불규칙한 식사의 습관화로 인한 건강도 문제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 가족끼리 식사하는 기회의 감소는 가족 공동체의 건전한 유지와 국민건강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는 비율이 아침은 37.6%, 점심은 79.0%, 저녁은 24.4%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9세 성인의 경우 아침 61.1%, 저녁 85.7%로서, 사실상 식사에서 가족의 개념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올바른 외식 문화에 대한 정립도 식생활 교육의 과제이다.

특히 외식의 증가 추세는 페스트 푸드와 함께 육류, 유지류 중심의 간편한 식사가 밥 위주의 전통적 곡류,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빠르게 대체함으로써, 탄수화물의 감소와 지질의 증가로 인하여 영양 불균형이 청소년기부터 고혈압, 당뇨병, 비만증, 동맥경화증 등과 같은 생활 습관병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이 문제되고 있다.

4) 식생활 관련 질병의 증가

20세 이상 인구의 비만 비율이 2005년 기준, 평균 31.8%(남 35.2%, 여 28.3%)이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의 비만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는 미래 국민건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비만의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는 2020년에 “비만 대란”으로 인하여, 국가 사회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관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의하면, 만성질환, 비만에 의한 경제적 손실액이 급증하여, 2001년 만성질환 유병률(유병률)에 근거하여 추정한 손실액이 연간 최소 5조 2,416억 원,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5년도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2대 사망 요인인 암과 순환기 계통 질환도 대부분 식이요인(食餌要因)에 의한 질병으로서, 포화 지방을 비롯한 지방의 과다 섭취, 식이섬유의 섭취 부족 등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5) 잘못된 식습관과 식품 폐기물의 증가

최근 빠른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와 조손가정의 증가 등으로 특히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05년 현재, 아침 결식률이 13～19세 23.0%, 20～29세 38.0%, 30～39세 17.2%로서, 특히 규칙적인 식습관을 통하여 심신의 건강을 돌보아야할 청소년, 청장년층의 결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인 것이다. 또한 홀로 식사하는 가족의 증가는 균형적인 영양 섭취도 문제이지만, 한 가족 “밥상공동체 문화”의 상실, “밥상머리” 교육 기회의 상실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생각할 때, 우수한 전통식문화의 복원, 유지 계승이란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먹을거리의 약 30%, 연간 약 15조원 가량이 식품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있다. 이것은 가정적으로,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고, 환경 생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품 폐기물을 감축하는 적극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6) 자연・생태・환경의 부하 증대

우리나라는 식량과 사료곡물을 많이 수입함으로서, 질소 수지가 불균형 상태이다. 식량 무역은 농산물로 형태를 바꾼 질소를 수입하는 것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식량 수출국은 수출한 식량 생산에 사용된 같은 량의 질소를 농지에 보충하지 못함으로서, 지력의 감퇴 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반대로 우리나라와 같이 식량을 대부분 수입하는 나라는 농지에 환원할 수 없을 정도의 질소가 방출, 유입됨으로써, 토질, 수질, 공기, 해양의 오염원이 되고, 최근 기후 변화에서 지적되고 있는 농산물의 원거리 수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말미암아 지구 환경에 부하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 제도는 로컬푸드 운동, 지산지소 운동, 슬로우푸드 운동 등과 함께 기본적으로 먹을거리는 가능한 자국에서, 소비지와 가까운 거리에서 생산하는 것을 소비하자는 운동으로서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7) 식생활 관련 교육, 정보의 부족

생활과 관련한 교육은 가정, 사회, 국가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실과, 기술, 가정 과목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식생활과 관련한 건강, 질병, 의식, 예절, 생태, 환경, 경제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높은 경각심과 함께 국가적, 국민적 의식 함양과 실천을 위한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적 차원에서 가정, 지자체, 국가적으로 식생활 교육 추진의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고, 구체적으로 실천적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식생활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먼저 식생활 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과 참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강력한 추진 체계의 구축,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안전한 식품, 높은 품질의 급식을 통하여, 청소년 학생들이 균형있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 우수한 전통 식문화를 배우는 기회,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마음 기르기 등 올바른 인성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또한 우리들은 식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각종 매체, 수단을 통하여 습득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매체를 통한 많은 정보들은 상업주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오히려 국민 건강과 올바른 식생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례가 많다. 때문에 식생활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식품 선택의 안목,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능력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

우리가 생각하는 식생활 교육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관한 일반적인 교육만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 유지와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 선택의 안목 배양, 전통 식문화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 확립, 식량 자급률 제고에 대한 국민 의식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 그리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통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식생활 교육이 매우 긴요하다는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

1) 식생활 교육은 국민 건강을 적정화한다.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식생활의 세계화는 전통적인 식생활 패턴의 다양화가 이루지고, 에너지와

영양 수준의 개선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나친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고지방, 고열량, 고염분, 그리고 지나친 맛내기, 모양내기, 간편식(패스트푸드 등), 상업화 식품의 범람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특히 청소년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기본적으로 올바른 식생활은 국민건강,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전통적인 식문화 그리고 우리 농업·농촌과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통하여, 균형적인 영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핵심이 식생활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 식생활 교육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한다.

우리는 국민들이 잘못된 식습관, 불균형적인 영양섭취, 불확실한 식생활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하여, 만성 퇴행성 질환, 성인병, 생활 습관병의 확대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질병, 환경문제로 인하여, 가정경제는 물론이고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릴 때 식습관은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국가 사회적 투자, 노력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3) 식생활 교육은 식품안전성을 확보한다.

일반적으로 농식품은 생산 단계에서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종 오염 물질(잔류 농약, 동물약품, 성장호르몬, 산업 화합물, 중금속 등)의 유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불신이 높아 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유통관리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식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조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입 식품 검역 관리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국내산 농식품의 경우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생산,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 그리고 상생하는 공동체 정신의 확립이 중요하다.

4) 식생활 교육은 학교교육을 풍부하게 한다.

식생활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현재 학교의 실과, 가정과 교육도 더욱 활성화 되고, 특히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급식 위생 및 안전 관리의 철저, 영양 관리, 그리고 지역 사회의 관심, 지자체의 지원으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식품 공급 체계를 지역 농업과 연관적으로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지역 농업발 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일본이 식육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식생활 교육은 지육, 덕육, 체육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인성 발달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식생활 교육은 식량 자급률 제고,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다.

최근 식량주권(Food Sovereignty)이라는 용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국민은 그들의 농업과 식량 정책을 관장할 권리가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21세기 최대 위기는 식량, 에너지, 환경, 기후 변화란 점을 인식할 때, 식량은 이러한 위기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인류 생존, 생태 환경의 핵심 과제이다.

식생활 교육은 이러한 21세기 위기 과제인 식량, 에너지, 환경,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를 포괄함으로써, 인류의 생명과 평화를 생각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

6) 식생활 교육은 전통 식문화의 고양,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우리는 우수한 식품과 식문화를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의 대량 수입, 외식의 빠

른 확대로 인하여, 우리의 우수한 전통식품, 식문화가 상실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의 전통음식은 식약동원(食藥同源)이라는 말처럼, 쌀의 문화, 다양한 채소, 산채, 다양한 콩 음식,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등 발효문화, 세련된 육류 문화 등 탁월한 우리만의 식문화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 식문화를 세계화 시대의 조류에 맞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전통 음식, 식문화가 잘못 이해되고 폄훼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전통 식문화의 위기적 현실은 농업과 농촌사회의 쇠퇴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은 농민만이 아닌 지역주민, 그리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 차원에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3. 식생활 교육의 추진 과제

식생활 교육의 대상은 전체 국민을 포괄하고, 교육의 범위는 식생활과 관련한 영양, 건강, 질병, 보건, 문화, 경제, 사회, 윤리 등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 생태, 자원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폭넓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식습관과 관련한 식생활 교육

우리의 식생활은 지질의 과잉섭취, 아침 결식 등의 불규칙한 식사, 홀로, 따로 하는 식사 등에서 연유한 영양불균형으로 청소년기부터 생활 습관병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의 확대, 부모의 취업 증가, 먹을거리의 외부화, 전통적 식생활의 번거로움, 먹을거리에 대한 지식, 정보 부족, 오류 등으로 식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식생활, 식습관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올바른 식생활의 확립을 국가 사회,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로서 깊이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애에 걸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식습관의 형성을 위한 교육이 식생활 교육의 첫 번째 과제이다. 특히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영유아기, 청소년기에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실시하는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

정부는 2003년 만성질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부적절한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목표와 식생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2004년 “한국인을 위한 연령층별 실천 지침”을 설정하였다.

식생활 목표는 “❶ 에너지와 단백질은 권장량에 알맞게 섭취한다. ❷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를 늘린다. ❸지방의 섭취는 총 에너지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❹ 소금은 1일 10그램 이하를 섭취한다. ❺ 건강 체중(18.5≤BMI<25)을 유지한다. ❻ 바른 식사 습관을 유지한다. ❼ 전통 식생활을 발전시킨다. ❽ 음식의 낭비를 줄인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생활 지침은 “❶ 곡류, 채소, 과일류 어육류,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자. ❷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 ❸ 건강 체중을 위해 활동량을 늘리고, 알맞게 섭취하자. ❹ 식사는 즐겁게 하고 아침을 꼭 먹자. ❺ 술을 마실 때는 그 양을 대폭 제한하자. ❻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 준비하자. ❼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식생활을 즐기자”로 지침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식생활 목표와 식생활 지침은 매우 적절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들을 올바로 실천하면, 우리의 식생활 교육이 지향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중요한 목표는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식생활 교육의 현실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더욱 강력한 실천 행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필요에 따라, 식생활 교육지원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2) 식품안전과 관련한 식생활 교육

우리의 현실은 농식품 안전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먹을거리가 사용가치보다 상품 가치에 치중하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잘못됨으로써, 위기 상황을 소비자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점이 없지 않다. 최근 광우병 파동, 멜라민 사건, 다이옥신, 유전자 조작 옥수수, 콩 수입, 유해 첨가물, 농약 잔류 독성 등등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는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 개방의 지속적 확대와 식량 자급의 해외의존 심화 등은 기본적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식품 안전성은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식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검역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일은 시급하다.

특히 국민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영유아, 청소년 학생들의 아토피 질환, 성장기 비만의 증가, 알레르기, 고혈압, 당뇨 등 식품 안전,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 습관병 질환의 지속적 증가에서 연유하고 있다. 2006년도 국민의료비 지출액이 54조 5천억 원으로서, 2000년도 26조 5천억 원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이 증가한 큰 이유도 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식품 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식품 안전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계도하기 위한 국민 교육 운동이 필요하다.

3) 생태, 환경, 자원과 관련한 식생활 교육

우리는 포식(飽食)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개발 도상국의 약 8억 5천만명 인구가 만성적인 영양 실조 상태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먹을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가공되고 상품화 되어 식탁에 오르고 있는지,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물론 식생활, 식습관은 개인의 문제일 수 있고, 개인의 기호일 수 있다. 그러나 지구촌 시대에 안전한 먹을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위한 문제는 인류적 관점에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

앞으로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식량을 수입으로 충당,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거리의 영양성, 안전성, 안정성, 그리고 친환경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식생활 교육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생활 교육과 실천 운동은 미국의 로컬푸드 운동,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 이태리의 슬로푸드 운동 등이 지역 먹을거리 체계와 연계하여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실천 운동,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

4) 농업・농촌과 관련한 식생활 교육

이제 농업・농촌은 식량만을 생산하는 단순 산업이 아니다. 생태, 환경, 지역을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레저, 관광, 휴식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복합 산업이자 복합 공간으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우리 농업은 갑작스런 개방으로 위기이다. 농촌이 공동화(공동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식량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농가경제는 쇠퇴하고 있다. 농민들은 농업과 농촌을 떠나려 한다. 농업 생산성은 정체하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농업이 쇠퇴하면 토양, 수질이 악화되고, 자연 환경도 아름답게 유지, 보전할 수 없다.

농업은 생명의 기초이다. 농업은 인간이 먹고 살아가는 삶의 근간이다. 농업은 우리의 전통문화, 협동, 두레, 세시 풍속 등 상호부조의 협동적 사회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온 뿌리이다. 우리 농업은 지금까지 국민

의 기초적 먹을거리를 풍족하지는 않지만 제공하여 왔다. 농업과 농촌은 많은 일자리 제공, 홍수 조절, 대기 정화, 정서 함양, 공동체 문화의 형성, 전통 문화의 계승 등 공공적 기능과 다원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공적 위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지식, 정보의 제공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농업의 가치와 기능, 공공적 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식량 생산, 식품 소비, 그리고 국민 건강에 이르기까지 농업·농촌과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식습관이 형성되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농업 생산, 식품 소비,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 교육은 가정, 학교, 지역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식생활 교육의 담당 주체

식생활 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한 부처의 책임만이 아닌 범부처적으로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실시되어야 한다. 물론 식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이 제정한 식생활교육지원법은 기존의 유사한 법률과는 다른 차원의 법률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 법에서는 식습관의 개선, 식품의 안전, 환경, 자원, 식량, 농업, 식문화 전통 등과 관련한 식생활 교육에 대한 기본 이념을 분명히 밝히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가정, 학교, 지자체,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 법에는 식생활 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위 주체들이 책임성 있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하는 제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식생활 교육 지원법 제정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식생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식생활 교육의 정신을 제시하고,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민적 의지를 담은 실천적 규범의 토대로서 역할하게 될 것이다. 이 법률에서 담고 있는 목표와 구체적 실천을 위해서, 정부가 앞장 서 책임성 있게 추진하여야 하지만, 학교, 소비자 단체, 생산자 단체, 전문가 그룹(교육, 의료, 보건, 영양, 조리, 식품기업, 언론 방송, 문화, 학계 등) 들이 실천 주체로 나서야 한다.